해남군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소식지·방송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남군 제공〉

곡성군은 청년 특화웹 '농담(農談)' 등으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소식지·방송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곡성군 제공〉

강진군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화훼 온라인 직거래'가 매니페스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진군 제공〉

해남·곡성·강진군,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해남 미남축제·달마고도 2개부문 수상
곡성 청년 웹 '농담'…3년 연속 쾌거
강진 화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모범
완도 5년 연속 우수사례 이름 올려

해남군과 곡성군, 강진군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해남군은 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소식지·방송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거머쥐었고, 완도군은 5년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 지자체 중 강진·해남·곡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여수·영광·완도·영암·해남군은 우수사례에 뽑혔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들을 발굴·확산하고 지방행정의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남군은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소식지·방송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미남해남(美南海南)의 기분좋은 변화'는 해남 농수산물과 먹거리를 주제로 한 해남미남축제 개최를 비롯해 365달마고도 워킹데이,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청년 기념품 협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 농민수당과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 기록도 세우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얻게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소식지·방송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군민과 더 가까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 곡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응모해 지역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특화 웹 소식지 '농담(農談)', 군정 비전을 공유하는 '월간곡성',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만드는 음식문화 콘텐츠 '오늘 뭐먹지?', 지역민과의 길거리 토크 콘텐츠 '마을이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곡성군의 3회 연속 최우수상의 배경은 철저한 공약 관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정자골 화훼 전국 온라인 직거래 희망을 꽃피우다'라는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 민·관 협치 사례다.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화훼단지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실시해 총 39만5000본, 7억9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 이전보다 수국은 30~50% 이상, 꽃작약은 50~100% 이상 소득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기존의 공매 방식이 아닌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유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완도군은 2015년 '공약 이행 분야'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일자리', 2017년 '도시재생', 2018 '전국 최초 해양환경관리팀 운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밖에 여수시는 '낭만이 있는 도시 여수에 오면 좋은 일(Job)이 생긴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일자리 및 고용 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영암군은 '초고령사회 가장 큰 두려움 노인빈곤을 고민하다'를 통해 초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은조·김계중·박희석·남철희 기자 dia@

민간투자 '목포 소각장' 의회 반대로 표류하나

시의회 "시가 직접 투자하라"…시 "되레 재정악화 초래"

830억원대 목포 대양동 자원회수(소각)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표류할 조짐이다.

15일 목포시와 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목포시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시설은 건축면적 4800㎡ 규모로 총 사업비 830억원 중 국비 356억원을 제외한 474억원이 민간투자(BTO)를 통해 진행한다.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지역(압해읍·지도읍 등 8개 읍·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20t(목포 200t, 신안 20t)을 처리하게 된다.

목포시의회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투자방식에서 목포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소각장 민간투자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소각시설 처리비용이 민간투자방식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 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재정사업 방식을 배제하고 민간투자를 밀어붙이는 배경에 민간투자자와 사전 접촉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A의원은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실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지난 2018년 9월 민간투자자가 사업 취지에 맞게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목포시와 사전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포시 설명대로라면 민간투자자가 쓰레기대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목포시에 정책을 세워준 꼴이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시의회는 목포시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의회 정책연구비를 활용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 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반영해 사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KDI) 검토 결과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

목포시는 재정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운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설계·시공·운영 사업자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자원회수시설을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 채무는 전국 지자체 243곳 중 40위(2018년 기준)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지방채 발행 대신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책"이라고 반박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득량만 황금어장 지켜라

지도선 6척·인력 30여명 투입
보성·장흥 등 지자체 교차 단속

득량만권 해역의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8일까지 득량만권 지자체인 보성·장흥·강진·고흥군과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 등 모두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 시설 면적 초과 등 양식어장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올해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담양, '귀농인의 집' 추가 조성

7년이상 운영 3000만원 지원

담양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임시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시로 거주하면서 마을이나 단체와 함께 농업·농촌을 경험하며 영농기술을 배우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다. 지역 내 빈집을 확보해 내부를 수리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7년 이상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마을이나 단체에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한다.

제1호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대덕면 운산리 운수대통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던 한옥(49.5㎡)을 수리해 조성했으며, 월 10만원의 임대료로 예비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제2호는 월산면 용흥리 용오름농촌체험마을 내에 이동식주택(30㎡)을 설치, 월 15만원의 임대료로 예비 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담양군은 관심, 준비,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다양한 귀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XA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RE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